

베트남전쟁의 현실과 일본의 평화담론

: 베평련과 전공투를 중심으로 *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국문요약

일본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두드러진 사회운동은 크게 보아 두 갈래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시민'이 중심이 된 비폭력 반전운동인 '베평련(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의 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좌익 학생'들이 중심이 된 폭력혁명 운동인 '전공투' 운동이었다. 이들 운동은 일본이 베트남전쟁의 전선에 군사물자를 보급하는 기지가 되어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전제로 한다면, 일본에서 베트남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은 '기지국가' 일본이 베트남전쟁으로 구조화된 동아시아의 전쟁 시스템에서부터 이탈할 것을 당면한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어야 했다. 따라서 그것은 평화헌법이 미일동맹에 의해 보증되는 '전후체제'의 해체를 요구하는 운동이기도 했다. 이에 호응한 것이 베평련과 전공투였다.

베평련과 전공투는 '기지국가'의 현실에 변경을 가함으로써 베트남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고리를 탈락시키고, 나아가 동아시아 규모로 확대되어 제도화한 전쟁의 시스템을 와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운동이었다. 이렇듯 '기지국가'의 평화운동은, '기지'의 해체를 목표로 하고 '국가'로부터의 이탈을 수단으로 한 베평련 운동과, '기지'와 일체화한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여 해체하려 했던 전공투 운동으로 분화되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들 운동에도 불구하고, '전후체제'는 살아남았고, 이들이 체현했던 평화의 담론들은 오히려 '전후체제'를 지탱하는 사상적 거점으로 간주되어,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외치는 세력들에게 비판과 비난의 과녁이 되어 있다.

주제어: 베트남전쟁, 반전운동, 평화주의, 베평련, 전공투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06).

I. 서론

일본에서 2014년 11월 21일 아베 2차 내각이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뒤이어 치러질 총선에서 자민당의 대승이 점쳐지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개를 3년 전에 누가 예상했을까? 3·11 이후 반원전운동의 고양 속에서 일본 사회의 변혁 가능성이 논의되고, 시민운동을 위한 전략지침서가 서점에 진열되어 있었던 것이 아득한 옛날이야기처럼 느껴진다.¹⁾

결국 시민운동은 실패했는가? 텅달아 반원전운동의 뿌리에 있던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도 수명을 다하고 만 것인가? 아베 3차 내각은 이에 대한 해답을 확인시켜주는 내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과연 자민당의 압승을 배경으로 자신감을 얻은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의 염원을 이루고, 일본은 ‘전후’와 완전히 결별할 것인가? 그와 동시에 ‘전후 평화주의’도 급기야 박물관에 들어가고 말 것인가? 본고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부러 먼 거리로 나가보려 한다. 가파른 속도로 달리는 기차에서 지나치는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시점을 먼 곳으로 옮겨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평화운동을, 특히 시민의 평화운동을 논의할 때 반드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하는 베트남전쟁 반대 평화운동에서부터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의 열쇠를 찾아보고자 한다.

일본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두드러진 사회운동은 크게 보아 두 갈래로 전개되었는데, 하나는 ‘시민’이 중심이 된 비폭력 반전운동인 ‘베평련(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 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좌익 학생’들이 중심이 된 폭력혁명 운동인 ‘전공투’ 운동이었다. 이들 운동은 일본이 베

1) 예컨대, 小熊英二, 『社會を變えるには』(東京: 講談社, 2012).

트남전쟁의 전선에 군사물자를 보급하는 기지가 되어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이는 이미 일본이 한국전쟁에 미국의 기지로 관여하면서 만들어진 현실이었고, 베트남전쟁에서 재현된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필자는 ‘기지국가’로 명명한 바 있다.²⁾ 이러한 현실을 전제로 한다면, 일본에서 베트남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은 ‘기지국가’ 일본이 베트남전쟁으로 구조화된 동아시아의 전쟁 시스템에서부터 이탈할 것을 당면한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어야 했다. 따라서 그것은 평화헌법이 미일동맹에 의해 보증되는 ‘전후체제’의 해체를 요구하는 운동이기도 했다. 이에 호응한 것이 베평련과 전공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운동에도 불구하고, ‘전후체제’는 살아남았고, 이들이 체현했던 평화의 담론들은 오히려 ‘전후체제’를 지탱하는 사상적 거점으로 간주되어,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외치는 세력들에게 비판과 비난의 과녁이 되어 있다. 따라서 아베 3차 내각이 헌법 개정을 시도할 경우, 전후의 반전평화주의에서 어느 정도의 힘으로 저항이 조직화되는가 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전망을 평화주의 진영에서 보면, 일본 내 평화운동의 최고조기였던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는 이 시기의 교훈에서 평화주의 진영이 무엇을 취사선택하는가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 1960년대 중후반, 베트남전쟁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던 베평련과 전공투 운동에 주목하여, 그들의 반전평화 담론을 분석하고,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추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 하에 본론은 다음과 같은 구성에 따라 전개된다. 우선 2장에서는 일본이 마주한 베트남전쟁의 현실을 한국전쟁 시기에 만들어진 ‘기지

2) 남기정, “한국전쟁과 일본: 기지국가의 전쟁과 평화,” 『평화연구』, 제9권 (2000), pp.167~188.

국가'의 연속성 속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베평련의 평화담론, 4장에서는 전공투의 평화담론, 5장에서는 베트남전쟁 속 일본의 현실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인식을 다룰 것이다.³⁾ 그리고 결론에서 이들을 종합하여 '전후체제'의 한 구성요소로서 일본의 평화주의가 지니는 속성을 밝혀 내고자 한다.

II. 베트남전쟁의 현실: '기지국가'의 전쟁

1. 주일미군기지: 한국전쟁에서 베트남전쟁으로

일본이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의 전진기지가 되어 있던 현실은 한국전쟁 시기의 일본의 위치와 역할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은 한국전쟁 발발과 더불어, 미군의 반격을 위한 출격기지가 되었다. 한국전쟁 기간에 전개된 공중 공격은 주로 일본의 공군기지 15곳에서 발진한 폭격기와 전투기에 의한 것이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일본의 비행장은 방어를 위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전투기가 출격한 뒤 돌아올 수 있는 한계지점에 있었다. 전투기들은 이타즈케(板付), 아시야(芦屋) 등 규슈(九州)의 기지에서 주로 발진 출격했다. 규슈 북부에서 서울까지 약 600km

3) 이 글에서는 '평화주의'와 함께 '평화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전공투 운동을 '평화에 대한 사상과 그러한 사상이 표출된 운동'으로서 재규정하고, 그들의 반전 평화에 대한 인식과 사상을 일본의 평화주의의 전개 속에 배치하려고 의도한 데 따른 것이다. 전공투 운동은 현존 사회와 국가의 파괴를 당면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비평화주의'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의 원천에 근본적인 반전 평화의 사상이 깔려 있었다는 점에서 '평화담론'의 범주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는 거리는 당시의 전투기들이 보조탱크를 사용해서 발진 회항할 수 있는 한도였다. 한편 폭격의 주역 B29가 주된 출격기지로 이용한 것은 요코타(横田)기지였다.

이렇듯 일본은 한국전쟁 전 기간을 통해 미국의 전쟁수행을 위한 후방 기지가 되었다. 숫자로 나타난 기지화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1953년 1월 31일 당시, 일본 국내에는 미군기지 733곳이 있었다. 그 넓이는 약 14만 헥타르, 일본 전 국토면적의 0.378%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미군기지는 대일강화 이후 오히려 정비, 확충되는 경향을 보였다. 1952년도와 1953년도의 미군기지 건수 및 토지의 증감을 비교해 보면, 건수는 1,212건에서 733건으로 줄어든 데 비해, 그 면적은 3억 1,013만 평에서 오히려 3억 1,187만 평으로 증가했다. 육상시설의 경우, 그 총수는 1952년 7월의 612건에서 1953년 4월의 581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를 무기한사용과 일시사용으로 구별하면, 일시사용이 312건에서 267건으로 감소한 데 비해, 무기한사용은 300건에서 314건으로 증가한 것이어서, 기지 확충 경향은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시사용 시설은 주로 병사(兵舍)와 같은 부속시설인 데 비해 무기한사용 대상이 되는 것은 비행장이나 연습장과 같은 중요 시설이었다. 중요 시설일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⁴⁾

주일미군기지는 한국전쟁 이후에도 현상을 유지해 오다가 1960년대 말에 들어서 정리축소계획이 제기되었다. 1968년 12월, 주일미군기지의 정리축소계획이 제9회 미일안보협의위원회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 내용은 일본 본토의 미군기지/훈련장 140곳 가운데 54곳에 대해 일부를 반환하고, 자위대와의 공동사용, 이전 등의 방법으로 정리 축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자위대로 이관을 완료하여 미군의 일시사용 기지가 되어 있던 훈련장을 반환하거나, 자위대와 공동 사용하기로 변경하는 등

⁴⁾ 남기정, “한국전쟁과 일본: 기지국가의 전쟁과 평화,” p.173.

이 주된 것으로 실질적인 삭감은 없었다.

그러나 닉슨이 베트남에서 미군을 삭감하는 결정을 정식으로 표명한 캄 독트린(1969년 7월 25일) 이후, 미군기지 재편 논의에 박차가 가해졌다. 그런 가운데 1969년 6월, 오키나와 반환을 위한 미일교섭이 개시되었다. 베트남 철수 이후의 미군 재편 계획과 반환 이후의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가 연계된 것이었다. 미군기지 재편과 통합에 대한 미일정부 간 협의는 1970년 5월 19일에 개최된 제11회 미일안보협의위원회에서 실시되었고, 1970년 12월 21일 제12회 미일안보협의위원회에서 주일미군 삭감 및 재편 계획에 합의했다. 그 내용은 미사와(三澤), 요코타(横田), 이타즈케(板付), 아츠기(厚木), 요코스카(横須賀) 등 미군기지의 축소, 재편이었다.⁵⁾ 자연히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자유로운 사용이 미국으로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정권은 국내 여론의 압박도 있어 오키나와에 저장된 핵무기의 철거를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억지능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 핵무기 지속 배치와 기지 자유사용권 확보를 중시했다. 이 문제는 미일밀약이 해소했다. 사토 닉슨 공동성명은 제8항에서, 일본의 비핵3원칙에 배치하지 않는 형식으로 오키나와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토 닉슨 공동성명에 관한 합의의사록’(이른바 밀약)에서는 “일본과 기타 극동지역에서의 방위를 위해 미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극히 중대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핵무기의 재반입 및 통과의 권리를 인정한

5)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我部政明, 『戦後日米關係と安全保障』(東京: 吉川弘文館, 2007); 베트남전쟁 시기 일본의 기지 재편에 대해서는 藤本博, “ヴェトナム戦争と在日米軍・米軍基地,” 『アメリカの戦争と在日米軍—日米安保体制の歴史』, (東京: 社會評論社, 2003); 미일밀약에 대해서는 外岡秀俊他, 『日米同盟半世紀—安保と密約』, (東京: 朝日新聞社, 2001) 참조.

다.”고 되어 있었다.

2. 베트남전쟁의 현실과 ‘기지열도’

한국전쟁 이후 주일미군기지는 네 차례 크게 변화했다. 첫 번째 변화는 1952년 강화조약 발효 시에 일어났는데, 점령기 최대 43만 명까지 늘어났던 ‘진주군’은 강화독립을 계기로 ‘주둔군’으로 이름이 변했으며, 접수가 일부 해제되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일본 전국의 기지와 시설은 2,800여 곳에 달했다. 두 번째 변화는 1957년도를 전후로 한 미군재편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전쟁 후 예산삭감으로 미 지상군이 철수하여, 8만 7천 명이었던 미군 병력이 3년 동안 5만 명 이하로 삭감되었다. 본토에 있던 제3 해병사단이 오키나와로 이동하자 본토의 기지는 절반 정도가 축소되었다. 세 번째 변화는 1964년 도쿄올림픽 전후로 한 수도권 미군기지 정비사업을 배경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1968년부터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된 주일미군기지 축소정비 ‘기본연구’에 따른 정비사업에 의한 것이었다. 이로써 현재 본토의 기지 모습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

한편 안보조약이 체결된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일본 본토의 미군기지는 약 13만 헥타르에서 3만 헥타르 정도로 감소했으나, 오키나와의 기지 면적은 두 배로 증가했다. 복귀 이전의 오키나와는 ‘평화헌법’의 범위 밖에 있어서 어떠한 헌법적 법률적 제약 없이 미군이 이용할 수 있었다. 미국은 오키나와를 통제함으로써 1965년의 다낭 침공에서 오키나와의 해병대를 이용할 수 있었고, 1968년부터는 괌에서 오키나와로 B-52 폭격기를 이동시켜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에 대한 공습을

⁶⁾ 外岡秀俊他, 『日米同盟半世紀—安保と密約』, pp.270~271.

전개했다.⁷⁾

이러한 상황에서 1965년 2월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북베트남에 대해 전면적 폭격을 개시하자 사토 내각은 이를 ‘불가피한 조치’라 하여 이해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안보조약의 형식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본토의 미군기지를 베트남전쟁의 후방기지로써 미국에 제공했다. 4월 14일에는 시나 에츠사부로(椎名悦三郎) 외상이 안보조약 상 ‘극동’의 범위를 재해석함으로써 사토 내각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1960년에 개정된 안보조약의 ‘극동조항’이 베트남전쟁에서 현실화한 것이다. ‘북폭’ 이후 오키나와는 물론 요코스카(横須賀)와 이와쿠니(岩國) 등의 미군기지가 베트남전쟁으로 향하는 항모와 폭격기의 출격기지로 변모했으며, 사가미(相模) 보급창은 수리조달기지가 되었다. 오지(王子)와 네리마(練馬)의 미군병원은 야전병원이 되었으며, 베트남전쟁 특별수요가 창출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전쟁 시기의 일본을 방불케 했다. 1965년 12월부터 1969년 3월까지 일본 본토의 기지에 귀휴한 미군병사는 약 11만 명이었다.⁸⁾

한국전쟁 이후 기지 주변의 반기지 운동이 활발해졌으나, 그것은 주민 운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른바 ‘반기지 운동’에 ‘외지인’의 지원이 없지 않았으나, 이 시기 반기지운동의 주체는 지역주민이었고, 외부 지원자는 아직 반기지 운동의 자각적 주체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1965년 2월의 북폭 개시로 인한 전쟁 확대는 일본의 기지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전쟁과 연계된 시설이며, 주일 미군기지를 매개로 일본이 간접적으로 전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눈뜨게 했다. 즉 일본 국민 전체

7) 개번 매코맥·노리마쯔 사토꼬 지음, 정영신 옮김, 『저항하는 섬, 오키나와』, (파주: 창비, 2014), p.102.

8) 青木深, “日本「本土」における米軍基地の分布と變遷: 占領期からベトナム戦争終結まで,” 『同時代史研究』 4卷, (2011), p.49.

를 ‘기지열도’의 주민으로 바꾸었던 것이다.⁹⁾

한국전쟁에 이은 또 하나의 ‘전후의 전쟁’인 베트남전쟁과 이에 대한 일본의 협력 문제는, 일본이 강화 독립하여 외교권을 획득한 이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일본 국민에게 보다 더 직접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 전후 평화와 민주주의에서 자기규정을 시도했던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평화헌법을 가진 국가로서 일본이 미국의 베트남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미일안보조약 하의 일본이 미국의 기지가 되어 베트남전쟁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일본인들은 더 이상 ‘평화국가=일본’이라는 등식 속에서 국민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베트남전쟁은 ‘기지국가’의 현실을 일본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어쨌거나 기지국가의 존재는 베트남전쟁에서도 유용함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평화국가’는 아니지만 ‘전쟁국가’도 아니었다. 오키나와를 포함해서 일본은 전쟁과 격리된 안전지대였고, 생활인의 일상적 생활세계를 무대로 전개되는 ‘생활평화주의’는 그곳에서 올라온 평화주의의 연약한 줄기였다고 할 수 있다.¹⁰⁾ 이 시기에 기성 좌익은 한국전쟁과 원수폭 금지운동에서 분열을 겪으면서 평화운동에서 권위를 상실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이른바 ‘계급과 민족’에 입각한 ‘진영 평화주의’는 행동력을 갖추었으나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고 있었고, ‘절대 평화주의’에 입각한 ‘강단 평화주의’는 이론적 정밀성을 갖추었으나 행동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 틈새에서 국민들의 반전 심성을 조직화해냈던 그룹이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 약칭 베평련이었다.

9) 清水知久, 『バトナム戦争の時代—戦車の闇・花の光』(東京: 有斐閣, 1985), p.179.

10) 남기정, “생활평화주의로 풀어보는 전후 일본의 평화론,” 『전후 일본의 생활평화주의』(서울: 박문사, 2014), pp.16~18.

Ⅲ. 베평련의 절대평화주의: ‘기지국가’의 시민운동

1. 반군에서 반기지로, 그리고 반전으로

베트남전쟁 시기에 일본에서 표출된 반전 감정의 맨 밑바탕에는 패전 직후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반군 의식이 있었다. 그리고 베트남전쟁에 반대하는 의식이 보통의 시민들을 조직화하여 운동의 형태로 나타나는 배경에는 1950년대에 전개된 반기지 운동의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이 둘이 합쳐진 형태로 분출된 1960년 안보투쟁이 반군 의식과 반기지 운동의 종합을 매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서 반군 의식이 평화운동의 형태로 분출되어 확산되는 데에서도 한국전쟁은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이를 주도한 그룹이 『들어라, 바다신의 목소리(きけ, わだつみのこえ, 이하 들어라)』 문집의 ‘출판을 기념하는 모임’이었다.¹¹⁾ 『들어라』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학도병으로 지원되어 전선에 차출되었던 대학생들이 전투 중에 틈틈이 적어놓은 문장들을 출판한 것으로 1949년에 도쿄대학 협동조합출판부에서 출판되었다. 여기에는 전몰학도 75명의 수기가 수록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의 수기에서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회의, 위화감, 저항의식 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전선에서 현지 주민들에 대한 가해 명령에 거부감과 반감을 적어놓은 수기는 전후 반군 평화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전거(典據)가 되어 왔다. 일본 병사가 내려친 바윗돌에 맞아 “두개골이 파열되어 선혈이 낭자하게 바닥에 쓰러진” 중국인에 대한 연민, 쓰러진 중국인을 발

11) 남기정,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원류와 전개, 그리고 현재,” 『역사비평』 제106호 (2014), pp.104~109.

로 차고 여기에 또 돌을 던지는 병사들과 이를 냉랭한 눈으로 바라보는 장교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자괴심, 구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고위급 장교에 대한 분노 등이 점철된 이 수기는 반군 의식에서 나오는 평화주의의 원류를 형성하였다.¹²⁾

『들어라』는 1950년 일본의 출판물 시장에서 베스트셀러 4위에 올랐으며, 같은 해 이를 원작으로 제작되어 개봉된 동명의 영화는 2,015만 엔이라는 경이적인 수입을 올리는 기록을 세웠다. 그 배경에 한국전쟁의 발발이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조직된 『들어라』의 ‘출판을 기념하는 모임’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일기 시작한 재군비 논쟁을 계기로 징병제 반대 서명운동을 조직하고 전개하면서 평화운동단체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반군 평화운동은 한국전쟁 시기 일본의 기지가 확충, 재편되는 과정에서 반기지 주민운동으로 보다 조직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사례를 우치나다(内灘) 투쟁과 스나가와(砂川) 투쟁에서 엿볼 수 있다.¹³⁾ 우치나다 투쟁은 1952년 9월 미군이 이시카와현(石川縣) 우치나다에 미군 포탄시험 사격장을 새로 건설하기로 한 데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이에 사회당, 공산당, 노농당 등이 반미투쟁 역량을 집결시키면서, 지방의 기지 반대투쟁이 전국적인 관심 속에 전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195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스나가와 투쟁은 우치나다 투쟁보다 더 분명히 거국적 규모로 전개되었으며, 반기지 운동의 ‘금자탑’으로 평가되곤 한다. 스나가와 투쟁은 그 재판과정을 통해 미국에 의한 기지화, 즉 ‘기지국가’로 변모한 일본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

12) 「川島正」, 日本戰沒學生記念會 編, 『きけ わだつみのこえ』(東京: 岩波書店, 2012), p.90.

13) 정영신, “동아시아 안보분업구조와 반기지운동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pp.229~234.

가 되었다.

이러한 반군 의식과 반기지 운동의 경험이 1960년 안보투쟁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런데 1960년 안보 투쟁에서는 평화운동에서 공산당이 후퇴하고 시민이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가 확인되었다. 일본공산당은 1960년 안보투쟁의 전개가 전학련(全學連)에 모인 학생그룹과 무명의 노동자 시민 주도로 흐르는 데 대해 경계하며, 이 둘의 합류를 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보통의 시민들은 ‘소리 없는 소리의 모임(聲なき聲の會)’에 모여들면서 1960년 안보투쟁의 광범위한 배후로 포진하기 시작했다. ‘소리 없는 소리의 모임’은 정당이나 노조에 의해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들이, 개인의 의지를 각자 표현하여 거리 투쟁에 참가하는 데모 방식을 최초로 제시했고, 이를 전개해 나갔다. 이 모임은 ‘시민집회를 제안함’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새로운 방식의 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제안서에는 ‘무당무파’의 입장이 강조되었고, ‘정치적 효율주의’를 배격하는 태도가 중시되었으며, ‘초보자와 비전문가’가 주체가 되는 집회가 목표로 설정되어 있었다.¹⁴⁾

이러한 태도와 집회 방식이 베평련에 계승된 것이었다. ‘소리 없는 소리의 모임’ 사무국을 담당하고 베평련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한 다카바타 케 미치토시(高畠道敏)는 이 시기의 ‘시민운동’이 ‘오랜 세월의 생활체험’과 ‘내면적 상처’에서 나오는 결의를 기저에 깔고 분출되어 나온 것으로 정리하였다. 즉 1960년 안보투쟁은 부조리한 시절의 전쟁체험을 기반으로 전후에 재건한 생활의 터전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태도가 집단적으로 공유되어 평화운동으로 발전되어 나온 것이었다.¹⁵⁾ 반군 평화가 반기지 평화와 결합하여 반전 평화로 전개되는 모습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米原謙, 『日本政治思想』,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2007), pp.267~270.

15) 米原謙, 위의 책, p.271.

2. ‘기지’ 해체를 통한 ‘기지국가’의 해체

이렇듯 전후 일본 국민에 체화된 반군 반전 평화주의는 1960년 안보투쟁을 거치면서 재확인되었다.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조직적으로 분출된 안보투쟁에도 불구하고 미일안보조약은 개정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를 강행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수상은 퇴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와 동시에 그가 추진하고자 했던 헌법개정과 재군비는 저지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1960년 안보투쟁은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은 일본 국민으로 하여금 ‘기지국가’ 일본의 현실과 직면하게 했다. 이러한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일본의 ‘보통의 시민’들이었다. 그들은 베평련이라는 이름의 운동체로 사회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베평련은 1965년 2월 7일 미군의 베트남 북쪽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철학자 츠루미 슌스케(鶴見俊輔), 소장 작가 오다 마코토(小田實) 등이 주도하여 4월 24일, 베트남 반전 집회를 연 것을 계기로 이후 정기적인 시민집회를 개최하고, 기관지를 발간 배포하는 것으로 베평련은 운동의 폭을 넓혀갔다. 베평련 운동의 최고조는 1969년으로, 전국에 360여 개의 지역 베평련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그해 6월 15일에는 베평련 집회에 5만여 명이 참가하는 등 정부 당국을 긴장시키는 존재가 되고 있었다.¹⁶⁾

베평련 운동은 베트남에 파견되기에 앞서 일본의 기지에 머물던 미군 병사들이 탈영을 시도하자 이들을 지원하는 운동으로 활동의 영역을 넓히면서 전후 일본의 평화운동이 도달한 새로운 지점을 확보하게 된다. 탈주병들은 국가라는 공동체의 명령을 거부한 자들이고 이들을 돕는 행위 또한 국가를 극복할 것을 요구한다. ‘베평련의 사상가’라 불린 츠루미

¹⁶⁾ 이하 베평련에 대해서는 남기정, “베트남 반전탈주 미군병사와 일본의 시민운동: 생활세계의 전쟁과 평화,” 『일본학연구』 제36집 (2012)를 참조.

요시유키(鶴見良行)는 여기에서 ‘국민으로서의 단념’이라는 사상을 마련했다. ‘국가’에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여 ‘개인’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평화운동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즉, 주권국가라는 기구에 국민이라는 성원이 있는 이상, 평화운동은 국민으로서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츠루미 요시유키가 말하는 ‘국민으로서의 단념’은 츠루미 슌스케가 말하는 바 ‘자기 내부의 국가를 지워가는 작업’이기도 했다. 베평련이 운동의 방법으로 주창한 시민적 불복종이나 비폭력 직접행동이라는 것은 자기자신의 양심 또는 자각이 국가의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철저한 ‘개인원리’의 발견과 실천을 통한 것이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탈주병과 함께 ‘국경을 넘는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이며, ‘시민적 불복종의 국제적 연대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베평련의 핵심 지도자였던 오다 마코토(小田實)는 ‘난사(難死)’의 사상 속에서 전쟁 체험과 반전평화주의의 정착을 시도하였고, 그러한 의식이 베트남전쟁에 투영되었다.¹⁷⁾

일본의 탈주병 지원 운동은, 운동 주체 측이 내리는 것과 같은 과대평가는 피해야 하겠지만, 미국의 전쟁사기를 꺾은 운동으로서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미국의 냉전정책에 전환을 일으킨 간접적 원인이기도 했다. 그것은 닉슨의 연설과 고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닉슨은 “용기 없이 유약하고 이기적이고 자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한 국민”의 존재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¹⁸⁾ 이는 탈주병과 반전운동에 결집한 젊은이들에 대한 다그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자신의 실패를 국민에게 돌리는 비겁함이 묻어나는 말이기도 하다. 냉전기 ‘탈

17) 小田實, “「難死」の思想,” 『「物」の思想, 「人間」の思想』(東京: 講談社, 1980).

18) 清水知久, 『ベトナム戦争の時代—戦車の闇・花の光』, pp.90-91.

국가적 시민운동'으로 전개된 반핵평화운동이 냉전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위트너와 캘더의 연구가 있는데,¹⁹⁾ 일본의 사례는 베트남전쟁에서 차지하는 주일미군기지의 존재를 생각하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1967년 6월 말까지 1년 동안 탈주병은 40,227명, 1968년은 53,352명에 달했다. 또한 무허가 이탈은 155,000명이었다. 병역거부자/기피자는 전 기간 동안 57만 명이었다. 가장 '모범적인 예'가 일본에서 탈주를 시도한 인트레피드의 4인이었다. 또한 1968년에는 군대 내 반전/민주화 요구도 분출하기 시작했다. 군인도 노동자라는 의식에서 '미군병사조합'이 결성되었으며,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는 150개의 기지에 약 5,000명의 조합원이 존재했다고도 알려졌다. 일본에서도 GI신문의 발간으로 대표되듯 군대 내 반전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군대 내 반전 운동은 기지 주변의 주민들이 전개하는 반기지/기지해체 운동과 연대하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반전/반기지 운동은 베평련 운동과 연대하거나 이에 포섭되어 전개되고 있었다.²⁰⁾

이렇듯 베평련이 체현하는 일본의 '생활평화주의'는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여 '탈주병'으로 표상되는 미군기지를 사유의 근거로 하여 일본의 시민사회를 포섭해 나가고 있었다. 이는 '기지'를 해체하고, '국가'를 부인하는 사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일종의 사상적 유희이긴 했으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미국이 일본의 기지를 충분히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일본에서의 미군 탈주와 관련한 미국의 대응은 일본 사법체계에 부딪혀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탈주병에 대한 스파이 활동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19) 田中孝彦, "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 『日本の国際政治學—歴史の中の国際政治』 (東京: 有斐閣, 2009), pp.47~48.

20) 清水知久, 『ベトナム戦争の時代—戦車の闇・花の光』, pp.95~97.

한편, 후술하듯이 이러한 일본의 반전운동은 한국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일간지는 명동에서 있었던 미군 병사의 시위를 짚막하게 전하였다. 이는 미국을 극도로 긴장시켰을 것이며, 북한에서 남북 일본인과 결혼한 남편으로 잘 알려진 젠킨스씨와 비슷한 사례가 허다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게 한다.

3. 베평련의 당파성 논쟁

한편 일본공산당은 베평련을 ‘무당파 시민운동을 가장한 반공적 당파 운동’으로 간주, 비난했다. 1965년 5월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アカハタ)』와 『젠에이(前衛)』에서는 우에다 고이치로(上田耕一郎) 등 공산당 간부들이 베평련 비판 캠페인을 펼치고 있었다. 이들은 베평련 운동을 ‘대중의 평화 희구 감정을 이용하여 이에 역행하는 수정주의자의 기도’로 보고 있었다.²¹⁾

1956년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 연설 이후 공산당에서는 ‘분트’ 즉 전학련 그룹이 이탈했으며 1960년 안보 투쟁 이후에는 구조개혁파가 배제되었다. 1964년 시점에서는 반소친중이며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미야모토 겐지(宮本顯治) 체제가 최고도로 순화되고 있었다. 초기 베평련을 구성하는 단체와 구성원 가운데에는 일본공산당에서 제명되거나 이탈한 ‘수정주의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베평련에 연대한 문화단체 가운데 ‘신일본문학회’와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회의’는 그 대표적인 존재였다.²²⁾ 일본의 소련파는 구조개혁노선을 지지했으며, 소련이 제창한 평화

21) 『アカハタ』, 1965년 5월 11일.

22) すが秀實, 『革命的な, あまりに革命的な—1968年の革命』史論』(東京: 國文社, 2003), pp.90~91.

공존 노선은 그 현실화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일부가 결성한 조직이 공산주의노동자당(공로당)이었다. 이들은 일본공산당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신좌익과 같은 입장이었으며, 베평련에도 적극 관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구세대 신좌익'이라고도 할 만한 사람들로 요시카와 유이치(吉川勇一), 무도 이치요(武藤一羊), 구리하라 유키오(栗原幸夫) 등이 있었다.

스가 히데미(すが秀實)는 자택(JATEC, 일본 탈주병 지원자 조직) 활동이 소련 고위간부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며, 그 정도의 고위간부와 극비의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던 인물로 아마구치 겐지(山口健二)를 지목하고, 베평련이 공로당 계열 보다도 윗선에서 직접적인 소련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²³⁾ 그러면서 그는 리버럴 반전평화주의를 내건 '보통의 시민' 운동으로서의 베평련에 대해 냉랭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스가는 '보통의 시민'이라는 것이 존재 가능한 것인가, 그들이 진정 '보통의 시민'이었는가 물으며, 직업적 활동가(특히 공로당 계열 활동가)들에 의해 주도된 베평련의 성격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²⁴⁾ 이는 새로운 문제제기이기도 하나, 그와 동시에 오다 마코토가 주도하고 그의 주변에 모여든 '보통의 시민'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목해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베평련에 비록 일본공산당과 대립하는 직업적 활동가 집단이 다수 자리 잡았다 해도, 그들은 적어도 '보통의 시민'을 주력군으로 한 베평련 운동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오히려 일본공산당과 거리를 두는 데 베평련을 근거지로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베평련을 '시민'의 운동이라 하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니라 할 수 있다.

23) 위의 책, pp.101~118.

24) 위의 책, p.135.

IV. 전공투와 절대평화주의 비판: '기지국가'의 폭력혁명

1. 평화운동으로서의 전공투

전공투란 전학공투회의(全學共闘會議)의 약칭으로, 1968년부터 1969년에 걸쳐 일본의 각 대학에서 실력투쟁을 전개한 학생운동 단체이다. 전공투는 각 대학 운영의 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비롯했던 측면이 있어서, 시기와 조직마다 각각 지향하는 바와 운동 내용이 달랐다고 할 수 있지만, 운동의 주체들 특히 지도부에서는 전후 민주주의의 급진적 실현과 베트남전쟁에 동조하여 세계혁명을 위한 반미 연대의 '이상'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공투는 '베평련'과 '반전청년위원회', '3파 전학련'의 베트남전쟁 반대 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배태되어 나왔다. 베평련은 위에 설명한 바 있는데, '반전청년위원회'는 베평련의 노동자관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당 청소년국, 총평 청년대책부, 사회주의청년동맹이 중심이 되어 북폭 반대와 한일조약 반대를 슬로건으로 1965년에 조직된 운동단체였다. 공산당은 위원회의 명단에 '트로츠키스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에 참가하지 않았다.²⁵⁾

한편 신좌익 계열의 학생운동 가운데에서는 '3파 전학련'이 적극적인 실력투쟁을 전개했다. 전학련이란 1960년대 초중반, 각 대학 학생자치회의 연합체로 출발했는데, 이후 당파에 따라 계열화가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3파 전학련'은 1966년 12월에 중핵파와 사학동(社學同), 사청동(社靑同)의 3파가 연합해서 전학련을 재건, 결성한 것이었다. 이들이 베트남

²⁵⁾ 道場親信, 『占領と平和—(戦後)という経験』(東京: 青土社, 2005), p.471.

반전 운동, 사토 수상에 베트남 방문 반대 투쟁, 원자력항모 엔터프라이즈 사세보(佐世保) 입항 반대투쟁, 스나가와(砂川)/산리즈카(三里塚) 투쟁 등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들 신좌익 당파들은 일본공산당의 공식노선과 그에 대한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주류에 반발하여 탈퇴하거나 제명당한 학생당원들이 중심이 된 조직이었다. 일본공산당은 1955년 한국전쟁 중 강령으로 채택되었던 무력혁명노선을 철회했다. 이후 일본공산당은 의회주의적 개혁노선으로 기울어졌는데, 이렇게 공산당 주류파가 의회주의로 기울어진 것을 혁명에 대한 원칙 없는 배반으로 생각한 학생당원들이 반발했고, 이들이 신좌익 섹트운동으로 흘러들어갔다.

전공투는 이러한 섹트운동과도 무관한 일반 학생 대중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출범했다. 초기에는 전공투도 조직 구성 원리에서 배평련과 비슷한 점이 있었다. ‘전공투’임을 선언하고 집회에 참석하면 전공투가 되었으며,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농성장 집회에 참석했다가 다음날은 운동(체육) 동아리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학생들도 있었다.²⁶⁾ 당시 도쿄대 총장대행이었던 가토 이치로(加藤一郎)의 전공투 평가도 비슷한 것이었다. “전공투의 매력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하여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조직없는 운동’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⁷⁾

전공투 학생들이 보기에 대학은 그 자체로 봉건적 일본이며, 실패한 일본의 근대이며, 미 제국주의이며, 미 제국주의의 세계지배를 용인하고 지원하는 아류 제국주의 일본이었다. 특히 도쿄대학 전공투에게 도쿄대학은 근대 일본의 참모본부였으며, 베트남과 제3세계 침략의 첨병 양성소였다. 대학의 비리와 권위주의는 이를 현재화하는 구체적 예였다. 따

26) 産經新聞取材班, 『總括せよ! さらに革命的世代 40年前一キャンパスで何があったか』(東京: 産經新聞出版, 2009), p.95.

27) 産經新聞取材班, 위의 책, p.134.

라서 대학의 파괴에서부터 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고, 그것으로써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

2. ‘국가’ 해체를 통한 ‘기지국가’의 해체

전공투 운동은 1969년 1월의 야스다(安田)강당 공방에서 절정을 맞이 한 뒤 수습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기에 사상으로서 전공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두 가지 예를 도쿄대학 고마바(駒場) 캠퍼스에서 벌어진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와 전공투 활동가들과의 대화, 그리고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의 ‘와다츠미 상(わだつみ像)’ 파괴에서 볼 수 있다.

1969년 5월 13일, 도쿄대 고마바캠퍼스에서 열린 미시마 유키오와 전공투 학생들 간의 토론에서는 미시마가 일본의 비폭력 평화주의에 대한 혐오를 표명하였고, 그 점에서 전공투 학생들과 공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시마는 폭력반대 결의에 서명해 달라는 자민당 의원의 요구를 거절했다면서, “태어나서 한 번도 폭력에 반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미시마는 “저는 우든 좌든 폭력에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폭력의 효과가 현재 아주 아이러니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단지 무원칙 또는 무전제로 폭력을 부정하는 사고방식은 의도하지 않게 공산당의 전략에 동참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고 하여 비폭력 의회주의와 호헌 평화주의 노선을 걷고 있던 일본공산당을 비판했다.²⁸⁾ 원래 폭력기제인 국가가 폭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미시마에게 일본은 더 이

²⁸⁾ 미시마 유키오 외 지음, 김항 옮김, 『미시마 유키오 대 동경대 전공투, 1969-2000: 연대를 구하여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서울: 새물결, 2006), p.21.

상 국가가 아니었다. 미시마가 조직한 ‘방패의 모임(楯の會)’은 그런 의미에서 현실의 국가, 즉 ‘기지국가’를 대체하는 이면국가(裏面國家)와도 같은 것이었다.²⁹⁾

이러한 미시마의 주장을 전공투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받아들였다. 즉 국가에 대한 일차적 정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권능으로 갖고, 또한 의무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³⁰⁾ 바로 그렇기에 전공투의 분위기 속에는 공산주의에 의한 국가의 폐기라는 신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전공투와 미시마는 전제와 결과가 뒤집힌 관계에 있었기에 대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같은 입장에서 서 있었던 것이다. 미시마와 동일하게 전공투 활동가들에게도 전후 일본은 ‘국가’가 아닌 존재였다. 전공투가 느낀 위기감이란 국가에서부터 오는 위기감이 아니라 새로운 위기감이었다. 그것은 “국가가 없는데 국가처럼 행세하는 놈들에 대해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 ‘유령’이었다. 일본이라는 존재는 ‘평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제나 기업활동을 해왔고 최종적으로는 국가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유령이며,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이상한 기호를 움직이면서 엄청난 니힐리즘을 준비하고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였었다. 그것은 한편 ‘국민을 군인으로 만들어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깎아먹으면서까지 공헌하는 일을 요구하는 의사(pseudo)국가’이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보수연합은 국가로 행세하려는 ‘가장 국가’, ‘가면의 국가’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국가는 민족주의를 표면에 내세울 수는 없고, 따라서 민족주의처럼 들리는 언설들은 “단지 노스텔지어를 교묘히 이용하는 ‘기억재생장치’에

29) 위의 책, p.43.

30) 위의 책, p.451.

기댄 ‘허구로서의 민족주의’일 뿐이라는 것”이다.³¹⁾ 이것이 베트남반전의 입장에서 대학의 파괴에 나선 학생들의 논리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이러한 논리를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었을까 의문이다.

같은 5월, 이번에는 도쿄에서 떨어진 간사이지방(교토)의 리츠메이칸대학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전공투 운동이 주목받았다. 전공투 운동의 고양 속에서 리츠메이칸대학에 세워졌던 ‘와다츠미 상’이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석상은 『들어라』의 발간을 기념하여, 1950년 1차 와다츠미 모임이 제작했던 것이다. 리츠메이칸대학에서는 이 석상 앞에서 정기적으로 ‘부전의 다짐’이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려 ‘반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전후 민주주의’를 타락과 부패로 치부하는 전공투 학생들에게 ‘와다츠미’는 반전의 상징이 아니라 반동의 상징이었다. 석상의 파괴를 주도했던 리츠메이칸대학 아유하라 사토시(鮎原輪)는 와다츠미 석상이 ‘의제(擬制) 평화와 민주주의 노선이 완만하게 부패해가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며, ‘전후에 살아남은 자들의 오만이 죽은 자들에게 강매한 면죄부’로 판단해서 파괴한 것이라 술회하였다. 실제로 전공투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그런 복잡한 인식과정 없이 보다 단순하게 사태를 보았다. 즉 『들어라』는 전쟁 중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던 자들의 유언에 불과한 것이며, 와다츠미 석상은 전쟁에 휩쓸려 들어갔던 전중파(戰中派)의 무력함을 상징하였다. 나아가 그들에게 와다츠미 석상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함으로써 권력에 영합한 어른들의 모습으로 어른 거리고 있었다.³²⁾ 그들에게 절대평화주의는 권력야합과 전쟁추인을 의미할 뿐이었다.

한편 전중파의 장년 세대들은 전공투 학생들의 ‘무지와 무치’, 그리고

31) 위의 책, p.455.

32) 福間良明, “「戦争體驗」という教養—「わだつみ」の戦後史,” 『史林』, 93卷 1號, (2010), p.186.

‘역사인식의 단순함’에 절망하며 경악하고 분노하였다. 다른 한편, 『들여라, 바다신의 목소리를』의 학도들이 ‘극한 상황에서 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도약’을 시도했던 것처럼 묘사되고 인식되는 데에 위화감을 느끼는 전공과 지식인도 있었다. 전쟁이 깊어가는 가운데 대부분의 일본인은 학생 어른 할 것 없이 전쟁의 현실에서 도피하고 있었으며, 집단적 환희에 들뜨거나 개인적 취미에 침잠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뇌하는 인상’의 와다츠미 석상은 허구이며, 이를 지적하는 것이야말로 전쟁체험을 전승하는 진정한 의미였다.

3. 근본주의적 평화주의와 교양주의의 부정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전쟁체험이라는 교양의 폭력’에 대한 저항이 교양주의의 몰락을 불러왔다는 사실이다. 교양주의는 그 소유자를 무소유자에게서 분리 차별하여 우월화하는 전략이며 그런 의미에서 교양의 정도로(=권위라는 이름으로) 서열화를 시도하고 이를 유지하는 폭력의 기제이기도 했다. 전쟁체험 또한 바로 이와 동일하게 전쟁체험의 무소유자를 소유자와 구분하고 차별화하여 ‘반전’운동의 전선에서 배제하는 기준이 되었다. 한편 전쟁체험의 소유자는 전쟁체험의 일반화를 거부하고 ‘반전’의 전선에 서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절대평화주의의 존립근거였던 ‘전쟁체험’은 이 시점에 와서 오히려 ‘반전운동’의 가능성을 차단했던 것이다. 전공투 학생들은 이렇게 폐쇄된 상황을 타파하려 했다. 교양과 반전의 접점, 나아가서 전쟁체험과 반전의 접점은 전공투를 계기로 분쇄되었던 것이다.³³⁾

33) 福間良明, 위의 글, pp.192~193.

한편 미치바 치카노부(道場親信)의 지적대로 전공투의 학원투쟁과 반전운동의 정치투쟁이 만나는 곳에서 전위당을 중심으로 한 국가권력 쟁취가 목표로 설정되었다. 반전의 정치투쟁이 궁극적인 과제로 설정한 것은 미국이라는 ‘제국’이었고, 이에 추종하는 자민당 ‘권력’이었다. 이를 타도하기 위해 전위당에는 군사적 역량을 수렴할 것이 요구되었고, 여기에서 ‘반전’을 위한 ‘군사’라는 모순이 발생했던 것이다. 미치바는 이러한 모순에 신좌익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대답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반전평화’가 ‘반제’와 ‘반권력’의 과제 속에서 달성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채택하게 되면 ‘제국’과 ‘권력’이라는 불의에 저항하기 위한 폭력은 ‘정의의 폭력’이 되는 것이었으며, ‘제국의 침략’에 저항하는 ‘정의의 전쟁’을 최종적으로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³⁴⁾

전공투에 대한 많은 회고와 비평, 그리고 연구들이 전공투를 베트남전쟁의 산물로서 그렸지만, 대학의 변혁과 사회혁명을 목표로 했던 모습에 경도되어 반전운동의 면모는 크게 다루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베트남전쟁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야스다 강당의 점거와 수상관저 돌진을 시도한 배경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벌어진 ‘테트 공세’가 있었다. 학생들은 일본이 베트남전쟁의 후방기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부정한 평화헌법의 정신이 훼손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제기했으며, 이에 둔감한 ‘어른들(공산당과 사회당 등 좌익을 포함한 기성세대)’에 대한 총체적 부정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다. 기존의 질서가 폭력을 용인하고 이를 내재화한 것이라고 할 때, 평화의 실현은 기존 질서의 파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전공투가 평화주의에 기여한 점은 다소 엉뚱한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즉 그들이 ‘국가’를 철저히 파괴하려 했다는 점이

³⁴⁾ 道場親信, 『占領と平和—(戦後)という経験』, p.475.

며,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수용되었다는 점이다. ‘국가’를 버리고 남은 곳에 ‘생활’이 있었다. 이후 국민은 ‘국가’에서 탈출하여 ‘생활’에 침잠해 갔다. 전공투는 ‘생활평화주의’ 형성의 또 다른 기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V. ‘기지국가’의 온존: 신문 논조와 국민 여론

1. 신문논조

일본의 각 미디어들은 1965년부터 특파원을 사이공에 파견, ‘일본인 기자’의 눈으로 본 베트남의 현지 정세를 앞 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의 경우, 특파원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눈물과 불꽃의 인도차이나”라는 제목으로 현지 리포트를 38회 연재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도 가이코 다케시(關高健)의 현지 리포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보도를 게재했다. 신문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의 눈으로 직접 본 현지 보도가 신문의 투서란 등을 중심으로 베트남 문제에 대한 여론의 고조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³⁵⁾

이 시기 일본의 신문은 매우 정력적으로 베트남전쟁에 대한 입장 개진을 하였으며, 그 논조는 대체로 확전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아사히신문』의 경우 1965년 2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사설을 23건 게재하였으며, 그 외에 지방지의 경우에도, 예컨대 『홋카이도신문(北海道新聞)』이 25건, 『중국신문(中國新聞)』이 19건 등 베트남 정세를 다룬 사설을

35) “座談會, ベトナム戦争と日本の新聞,” 『新聞研究』, 168號, (1965년 7월), p.10.

집중적으로 내보내었다.

이들 신문의 논조는 미국의 베트남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와 미국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는 논조로 양분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은 전자의 입장에서 쓰인 것들이었다. 특기할만한 것은 『닛케이(日本經濟新聞)』의 보도 태도였다. 『닛케이』는 남베트남 시민들이 다른 신문들의 보도만큼이나 전화에 휩싸여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북폭을 필요악이라는 관점에서 보도하였다.³⁶⁾

이 시기 일본의 신문사 보도에 대해서는 신문사의 사론이 보도에 지나치게 반영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신문 판매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신문사의 입장이 보도에 반영된 것 같아 우려된다는 의견이었다.³⁷⁾ 그러나 이를 거꾸로 이해하면 베트남 문제는 그 만큼 ‘팔리는’ 주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베트남 문제를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독자들이 있었고, 마침 『마이니치신문』이 베트남 보도에서 치고 나가자, 다른 신문사들도 경쟁적으로 베트남 보도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것이 기사의 ‘생산과잉’을 불러 왔던 것이다.³⁸⁾

또한 베트남 보도에 국제부만이 아니라 사회부가 관여하게 된 신문업계 내부 사정이 베트남 보도에서 센세이셔널리즘을 두드러지게 한 요인이 되었다. 즉, 아시아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일반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듯 사회부가 베트남 문제를 취급하게 되었고, 그것이 베트남 보도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경향을 낳았다는 것이다.³⁹⁾

36) 위의 글, p.12.

37) 위의 글, p.12.

38) 위의 글, p.13.

39) 위의 글, p.13.

2. 국민여론

다수의 신문논조가 ‘확전 반대’를 주장하는 가운데, 일본 국민은 절대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수단에서는 미일안보조약에서 약속한 기지제공의 현실과 전후 헌법 안에서 자위대의 현상유지를 지지하는 모순을 보였다.

우선 1966년 3월의 내각 관방광보실 조사를 보면, 일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76%인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13%였다. 이는 일본 국민의 절대 다수가 절대 평화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치였다. 평화헌법의 ‘전후 민주주의’가 체화되어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질문에서는 절대 평화주의의 입장을 보인 응답자 가운데, 조건부 질문을 던지면 ‘자위의 전쟁’을 용인하는 입장은 46%로 과반에 육박하고 있었다. 사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전후 민주주의’의 취약성 또는 이중성(전공투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기만성’)이 나타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76	직접침략을 당해도 전쟁은 안 된다	18
		직접침략을 당한다면 어쩔 수 없다	46
		모르겠다	12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	13	침략 시 자위를 위해서라면 용인한다	11
		기타/무응답	1.8
모르겠다	11		
합계	100		

같은 조사에서 “일본은 자유주의 진영에 들어 있는데, 당신은 앞으로 도 자유주의 진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공산주의 진영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중립주의의 입장에 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유 진영 50%, 중립 25%, 공산 진영 1%, 모르겠음 24%이었다.⁴⁰⁾ 여기에서 중립이라 대답한 사람 가운데, 실제로 중립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응답이 9%,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11%였으며(모름이 5%), 중립주의를 취했을 때 방위력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4%가 찬성, 7%(모름이 4%)가 반대였다. 한편 미일안보조약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84%였으며,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16%였는데, 알고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안보조약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38%,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14%, 모르겠다는 응답이 32%(합계 84%)였다.⁴¹⁾

일본의 일반 국민은 베트남전쟁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러한 현실이기에, 평화헌법 하의 제한적 군비와 미일안보조약을 지지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베평련과 전공투의 반전 운동이 전개되었던 현실에서도 그다지 변화하지 않은 것 같다. 1969년 12월에 실시된 설문조사 가운데, 당면한 일본의 방위 수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본 국민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40) 内閣總理大臣官房廣報室, 『自衛隊の廣報及び防衛問題に關する世論調査』(1966년 3월), pp.26~27.

41) 内閣總理大臣官房廣報室, 위의 책, pp.27~28.

안보조약도 자위대도 현상유지가 좋다	28
안보조약을 계속하면서 자위대를 증강시킨다	25
안보조약을 해소하고 자위대를 축소 또는 폐지한다	10
현재의 일미안보조약을 해소하고 자위대를 강화하여 자주방위의 태세를 갖춘다	9
D.K.(잘 모르겠다)	28

이를 1949년 8월의 조사와 비교하면 보다 분명한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이때의 조사에 따르면 “당신은 일본을 위해 영세중립을 원합니까, 집단안보를 원합니까?”라는 단순한 질문에 대해 영세중립을 선택한 사람이 73.4%로 집단안보를 선택한 사람(16.6%)을 압도하고 있었다.⁴²⁾

1969년과 1972년에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여전히 국민의 41%가 ‘현상을 유지하여 미일안보체제와 자위대로 일본의 안전을 지킨다’는 수단을 지지하고 있다. 안보조약을 해소하고 자위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1969년에는 13%였다가 1972년에는 11%로 줄어든 반면, 안보조약을 해소하고 자위대도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주장은 10%에서 16%로 증가하고 있다. 즉 ‘기지국가’를 해체하자는 데 찬성하는 입장은 여전히 소수 의견이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기지국가 해체 이후 자주적 국방국가로의 변화’를 지지하는 국민은 더욱 감소하고, ‘미군에 대한 기지제공도 자위대도 필요 없다’는 ‘절대평화주의’의 입장은 근소하나마 증가했다. 이는 베트남 반전운동의 미약한 성과였다.

	1972년	1969년
안보조약을 해소하고 자위력을 강화하여 일본의 안전을 지킨다	11	13
현상을 유지하여 일미안보체제와 자위대로 일본의 안전을 지킨다	41	41

42) 芹澤功, “安全保障と世論,” 『海外事情』(1970년 6월), p.49.

안보조약을 해소하고 자위대도 축소 또는 폐지한다	16	10
기타	1	1
모르겠다	31	35
합계	100	100

베트남전쟁이 종식된 1975년, 일본의 국민은 ‘기지국가’의 현실을 답답히 받아들였다. 일본 국민은 당면한 일본의 방위를 위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⁴³⁾

현상을 유지하여, 미일 안보조약 체제와 자위대로 일본의 안전을 확보한다	54
안보조약을 해소하고 자위력을 강화하여 일본의 독자적 힘으로 안전을 지킨다	9
안보조약을 해소하고 자위대도 축소 또는 폐지한다	9
기타	1
모르겠다	27

‘기지국가’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국민이 과반을 넘고 있었으며, ‘자주방위’도 ‘절대평화주의’도 1할을 넘지 못하는 소수의견이 되어 있었다. 1975년의 다른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미일안보조약에 의한 안보를 선택지에서 배제한 채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의 대응에 대한 질문이었다.

자위대에 참가해서 싸운다	6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위대를 지원한다	32
계렬라적 저항을 한다	2
무력에 의하지 않은 저항을 한다	14
일체 저항하지 않는다	12
기타	1
모르겠다	33

43) 内閣總理大臣官房廣報室, 『自衛隊・防衛問題に関する世論調査』(1975년 10월), p.18.

절대평화주의 입장을 고수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하고, 자위 전쟁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이 40%였다. 이는 위에 소개한 1966년 3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베평련과 전공투의 운동이 국민의 의식을 절대평화주의로 고양시켰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전개해야 했던 만큼, 절대평화주의에 입각한 운동은 ‘느슨하거나(베평련)’ ‘과격하거나(전공투)’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베트남전쟁이 전개되는 사이에 오키나와와는 일본에 ‘반환’되었고, 본토에서 미군기지가 축소되는 만큼 오키나와에서는 미군기지가 확충되었다. 이에 따라 ‘기지국가’의 속성이 ‘기지의 섬’에 집중되어 표현되기 시작했다.

VI. 결론

일본에서 베평련 계통의 운동이 탈주병 지원운동에서부터 미군기지 영내의 반전운동 지원운동으로 전환될 즈음, 한국의 서울에서도 미군병사들의 탈주 농성사건이 있었다. 『매일경제신문』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971년 5월 17일 오후 5시 경, 어네스터 허스트 일병(22세) 등 30여 명이 명동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서울 중부서에 연행되었고, 이후 미8군 당국에 이첩되었다는 것이다. 시위에는 권영욱(20세) 등 한국인 4명도 가담했는데, 이들은 남대문서에 연행되었다가 훈방되었다고도 한다.⁴⁴⁾ 필자가 찾은 기록으로 한국에서 탈주 미군병사가 모습을 공개적으

44) 『매일경제신문』, 1971년 5월 18일; 『경향신문』, 1971년 5월 18일.

로 드러내어 시위를 벌이고, 이를 한국인이 지원한 사례는 이 사건이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일본에서 탈주병이 속속 나타났을 때 시민들의 지원 운동이 조직화된 것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사례가 보도되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전선'에 세워진 '전장국가' 한국과 '후방기지'의 역할이 주어졌던 '기지국가' 일본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점이라 생각된다.

베평련과 전공투는 '기지국가'의 현실에 변경을 가함으로써 베트남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고리를 탈락시키고, 나아가 동아시아 규모로 확대되어 제도화한 전쟁의 시스템을 와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운동이었다. 이렇듯 '기지국가'의 평화운동은 '기지'의 해체를 목표로 하고, '국가'로부터의 이탈을 수단으로 한 베평련 운동과, '기지'와 일체화한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여 해체하려 했던 전공투 운동으로 분화되어 전개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운동이야말로 평화헌법이 미일동맹에 의해 보증되는 '전후정치'의 해체를 의도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운동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전공투는 학생들의 미숙함과 과격성으로 인해 실패했고, 베평련은 베트남전쟁 종식에 일정 부분 기여하여 부분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반전을 통한 '전후정치'의 해체가 목표였다고 한다면 전공투는 물론이거니와 베평련도 실패한 것이며, 오히려 베평련의 반전평화주의는 '전후체제' 그 자체의 일부가 되어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들 운동에도 불구하고 '기지국가'의 현실은 굳건히 온존되었고, 국가와 국민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이들 운동은 일본의 평화주의 전개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지금의 현실에서 어떠한 의미를 투사하고 있는 것일까?

베트남전쟁은 당사자가 아닌 일본에게 어쩐지 옆집의 불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짝짝한 전쟁이었다. 미국이 일본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이라도 치르듯 미국이 치르는 전쟁에 간접적으로 가담해서 ‘가해자’ 편에 서 있는 일본의 현실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전쟁이었다. 한국전쟁에서 일본은 베트남전쟁에서보다 밀도와 강도가 더 높은 협력을 하였고, 거기에서 오는 경제적 수혜도 베트남전쟁 특수에 비해 훨씬 큰 것이었지만,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다는 조건 속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일본의 협력 문제는 일본인 일반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에서는 오히려 생활의 여유를 실감하면서, 일본인은 그 풍요의 근원에 대한 찝찝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 학생들이었다. 그런데 베평련이나 전공투 운동이 돌출되어 특기할 만한 주목을 받았던 것은, 거꾸로 일반 대중이 베트남전쟁에 절실한 관심을 기울이고 국민적 반전운동을 조직해 내지 못했거나 조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쩐지 찝찝한 느낌은 갖고 있지만, 어차피 미국의 전쟁이고 이를 말릴 힘은 일본에게 없다고 체념하고 있었으며, 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일본의 번영과 안전에 해가 될 것이라는 손익계산을 암암리에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감은 하지만, 함께 일어나 나서지는 않았다. 베평련이 경계했던 것, 그리고 전공투나 미시마 유키오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나약함과 영리함’이었다. 전공투가 실패하고 미시마 유키오의 자결이 잊혀진 뒤, 일본에서는 ‘나약하고 영리한’ 평화주의가 주류담론으로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나약하고 영리한’ 평화주의는 점차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헌법개정론자들의 해일을 견디어 낼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생활에 안주한 전후 평화주의의 ‘나약한’ 면에 주목하면, 그 대답은 회의적이다. 이는 2011년의 여름을 정점으로 점차 수그러들고 있는 일본의 반원전/평화운동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그러나 전후 평화주의는 ‘영리함’을 동시

에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전쟁 와중에도 국민의 현실주의적 감각은 일본 외교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기지국가'의 현실에서 벗어날 때의 '경우의 수'를 따지는 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다. 베평련이 탈주하려 하고, 전공투가 파괴하려 했던 '국가'를 결국 떠나지도 못하고 온존시킬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국민은 일본의 전후 '국가'가 '기지'와 일체화되어야 유지될 수 있음을 날카롭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른바 '전후체제'의 강력한 후원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군사적 우경화의 폭과 속도는 헌법개정론자들이 이러한 '영리한' 평화주의를 어떻게 상대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것은 주변 관계국의 대일 정책이 일본 국민의 '영리함'을 이해하고 있는가에도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접수: 2014년 11월 6일 / 심사 : 2014년 12월 1일 / 게재확장: 2014년 12월 1일

【참고문헌】

국문단행본

- 개번 매코맥·노리마쯔 사또꼬 지음. 정영신 옮김. 『저항하는 섬, 오끼나와』. 파주: 창비, 2014.
- 미시마 유키오 외 지음, 김항 옮김, 『미시마 유키오 대 동경대 전공투, 1969-2000: 연대를 구하여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서울: 새물결, 2006.

국문논문

- 남기정. “베트남 반전탈주미군병사와 일본의 시민운동: 생활세계의 전쟁과 평화.” 『일본학연구』 제36집 (2012). pp.73~96.
- 남기정. “생활평화주의로 풀어보는 전후 일본의 평화론.” 『전후 일본의 생활평화주의』. 서울: 박문사, 2014.
- 남기정. “일본의 전후평화주의: 원류와 전개, 그리고 현재.” 『역사비평』 제106호 (2014). pp.94~134.
- 남기정. “한국전쟁과 일본: 기지국가의 전쟁과 평화.” 『평화연구』 제9권 (2000). pp.167~188.
- 정영신. “동아시아 안보분업구조와 반기지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외국어단행본

- すが秀實. 『革命的な, あまりに革命的な—「1968年の革命」史論』. 東京: 國文社, 2003.
- 內閣總理大臣官房廣報室. 『自衛隊・防衛問題に關する世論調査』(1975년 10월).
- 內閣總理大臣官房廣報室. 『自衛隊の廣報及び防衛問題に關する世論調査』(1966년 3월)
- 道場親信. 『占領と平和—(戰後)という經驗』. 東京: 青土社, 2005.
- 米原謙. 『日本政治思想』.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2007.
- 産經新聞取材班. 『總括せよ! さらば革命的世代 40年前—キャンパスで何があったか』. 東京: 産經新聞出版, 2009.
- 小熊英二. 『社會を變えるには』. 東京: 講談社, 2012.

- 我部政明. 『戦後日米関係と安全保障』. 東京: 吉川弘文館, 2007.
 外岡秀俊他. 『日米同盟半世紀—安保と密約』. 東京: 朝日新聞社, 2001.
 日本戦没學生記念會 編. 『きけ わだつみのこえ』. 東京: 岩波書店, 2012.
 清水知久. 『ベトナム戦争の時代—戦車の闇・花の光』. 東京: 有斐閣, 1985.

외국어논문

- 芹澤功. “安全保障と世論.” 『海外事情』 (1970년 6월).
 藤本博. “ヴェトナム戦争と在日米軍・米軍基地.” 『アメリカの戦争と在日米軍—日米安保体制の歴史』. 東京: 社會評論社, 2003.
 福間良明. “「戦争體驗」という教養—「わだつみ」の戦後史.” 『史林』 93卷 1號 (2010).
 小田實. “「難死」の思想.” 『「物」の思想, 「人間」の思想』. 東京: 講談社, 1980.
 田中孝彦. “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 『日本の國際政治學—歴史の中の國際政治』. 東京: 有斐閣, 2009.
 青木深. “日本「本土」における米軍基地の分布と變遷: 占領期からベトナム戦争終結まで.” 『同時代史研究』 4卷 (2011).

신문 등 정기간행물

- 『경향신문』. 1971년 5월 18일
 『매일경제신문』. 1971년 5월 18일
 『アカハタ』. 1965년 5월 11일.
 “座談會, ベトナム戦争と日本の新聞.” 『新聞研究』. 168號 (1965년 7월).

The Vietnam War and Pacifism in Japan
: Focusing on Peace Discourse of Beheren and Zenkyoto

Nam, Ki-Jeong (IJ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During the Vietnam War there were two major types of social movements in Japan: one was called Beheren(Peace to Vietnam! Citizens' Coalition), which was a nonviolent antiwar movement run by ordinary citizens. The other was Zenkyoto, a revolutionary violent movement whose main protagonists were university students of the new left wing. These movements arose largely out of discontent that Japan was used as a base to supply the Vietnam War with military goods. Many Japanese were unhappy with this situation and thought that the country should not be associated with the Cold War or the war efforts of the United States in East Asia. In this vein they demanded the deconstruction of the Post-war system where the Peace Constitution was endorsed by the US-Japan alliance.

People participated in Beheren or Zenkyoto would like to make Japan stop participating in the Vietnam War by changing the reality of the military base-state and then challenging the war system in East Asia. While Beheren aimed to deconstruct the military bases and cut ties with the US, Zenkyoto's goal was to deconstruct Japan itself which was identified with the U.S.

military bases. Peace movements in Japan as a 'base-state' have had goals to which both two different groups aimed. But in spite of these movements the post-War system has survived. Furthermore, the philosophical roots of these movements were conserved as thought to support the post-War system, and were therefore criticized by groups insisting on breaking away from the system.

Keywords: the Vietnam War, antiwar movement, pacifism, Beheren, Zenkyoto.

남기정(Nam, Ki-Jeong)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일본 도호쿠(東北)대학 법학부 교수,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를 지냈고 현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부교수로 있다. 저서로 『전후 일본 그리고 낯선 동아시아』(편저), 『기지의 섬, 오키나와』(공저), 역서로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 등이 있다.